광주시·전남도·정치권 '행정통합 입법 활동' 본격화

국회서 조찬 간담·공청회 개최…특별법 초안 검토
가칭 '광주전남특별시'…파격재정·권한 이양 등 반영
특별법 이달 발의, 2월 통과 목표…공감대 확산 나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도가 마련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 활동이 본격화 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시도가 마련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가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체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가칭)'로 하고 시도 광역의원 선거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현행 기준대로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오후 1시에는 국회의원 제1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이·양부남 의원)와 함께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양부남·정진욱·안도걸·조인철·전진숙·민형배·김원이·신정훈·조계원), 광주시의회 의원, 김명수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최승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박종명 서울시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양광용 광주·전남시도민회장과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단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단원인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공청회 토론에 앞서 발제를 통해 광주전남특별시 발전 비전으로 '4대 거점 경제권' 형성과 '60분 생활권' 실현을 제시했다.

통합된 광주전남을 동부경제권(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곡성·구례)은 '첨단소재·우주' 경제축으로, 중부경제권(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함평·영광)은 'AI융합혁신' 경제축으로, 서부경제권(목포·무안·영암·해남·신안·진도·완도·강진)은 '그린에너지' 경제축으로, 남부경제권은 '남해안웰니스' 경제축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광주전남통합경제권 구축을 위해 중부경제권의 핵심인 광주에서 모든 지역을 60분 이내로 연결하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조성해 각 경제권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광주전남 미래성장 전략으로 △모빌리티·반도체벨트 △남도문화역사관광벨트 △기간산업·첨단소재벨트 △서남해안해양관광벨트 △우주항공벨트 △첨단바이오헬스벨트 △신재생에너지벨트를 각 권역별 강점을 연계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 이원희 전 한국행정학회장,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통합의 효과로 국고교부율을 높여 지방재정분권을 확대하는 방안, 통합 소요 비용을 미리 추산해 확보하는 방안, 지방경찰은 물론 교육자치까지 자치를 확대하는 방안, 현행 자치구과 시군의 자치권과 자치재정의 격차를 극복하는 방안, 특별시장에 국무위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통합정부를 견제할 통합의회를 균형있게 재구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총 8편, 23장, 312개 조문,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는 행정통합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특별법은 인공지능, 모빌리티, 문화수도,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비롯해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시도민이 체감할 제도적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시·도는 이달말 발의,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전남 통합 가시권…재정권한 배분 핵심

정부, 오늘 '행정통합 지원 특례' 공개 예정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주목…특례 범위도

정부가 광역단체 행정통합 지원안을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가시화하고 있어 통합 지자체에 중앙정부의 재정·행정 권한이 어느 수준까지 이양될지에 주목된다.

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서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재정 분권이다. 재정 분권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현재 7.5대 2.5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될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정도로 확대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와 기간 역시 중요 내용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통합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역 특화 산업 지원, 공공기관 이전 우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위한 특례 조항이 정부안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도 관심 사항이다.

아울러 통합 지자체가 지역 개발과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특별자치권을 어느 수준까지 누리게 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4일 광주·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전남지역에 RE100(재생에너지만 사용) 산업단지를 비롯한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담회가 끝난 뒤 양부남·김원이 의원은 "국무총리가 대규모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집중 지원, 산업이나 기업 유치 지원 등에 대해 정부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정부안 발표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내 특별법안을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초대 광주전남통합시장 여론조사 NO"

박지원, 후보 거론에 "국회서 할 일 있다"

더불어민주당 5선인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사진)은 15일 '초대 광주전남통합시장 후보'로 거론되는데 대해 "국회에서 할 일이 있다"며 사양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최근 각종 매체에서 '초대 통합시장 후보 여론조사'에 자신을 넣겠다고 하자 "미안하지만 빼달라"고 정중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조정식·김태년 의원과 함께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지난달 4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압도적 지지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인 (주)시그널앤펀스가 서울의 신문 의뢰로 실시한 지난해 11월 28~29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ARS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박 의원은 국회의장 적합도에서는 23.6%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달렸다.

이어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 5.7%,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 시 수 정 구) 5.2% 순이다. 기타 34.8%, 없음 21.8%, 모름 8.9%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 의원이 광주전남통합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가장 선수가 많고 고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의원은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고, 국회의장 선거, 당 원내대표 선거 등이 있어 이재명 정부 성공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국정이 안정되고,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행정통합 특별법'서 계속

산업 분야에서는 첨단산업과 국가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가 집중됐다.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관련 사업은 정부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특별시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투자 유치와 연계된 산업단지는 특별시장이 직접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주도의 산업 전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단지와 공항·항만, 국가기간 철도망을 연결하는 기반시설은 국비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이양하고, 해상풍력은 입지·계통·항만을 국가와 특별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전력망과 계통 안정 문제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지역과 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특별시에 공공기관을 우대 배치하고, 신설·추가 이전 시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기관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한편 특별법은 이달말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28일 본회의 상정과 의결이 예상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월부터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가 본격화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 지방정부인 광주전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텅빈 혈액 창고 겨울철 학생들의 방학과 독감유행으로 인한 헌혈인구 급감으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15일 광주 남구 송하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 혈액보관창고에서 직원들이 혈액량을 점검하고 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분 이상이나 현재 3일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법원, 오늘 윤석열 내란재판 첫 결론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도

법원이 1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추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 등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정인화 시장 "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물류·에너지 기능 고도화 등 정부 결단 촉구

정인화 광양시장(사진)은 15일 '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 항만육성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이날 시청 열린홍보방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현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북극항로 경제권 항만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양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LNG터미널과 LNG벙커링 시설을 모두 갖추고 컨테이너,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벌크화물까지 거의 모든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합항만으로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에너지 허브항만 육성, 북극항로 대응하기 위한 항만인프라 확충,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 기술, 인력 체계 강화, 물류기업 지원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전남도와 광주시의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며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 인프라 확충과 물류. 에너지 기능 고도화에 대해 책임있는 국가 투자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